

전문지 NEWS 클리핑



◎ 동약업체, 잇따 부도피해 몸살에 '경계 목소리' 팽배

“도매상 리스크에 불안...의존도 줄여야”

지역거점별 대리점 육성·직판체계 구축 대안 제시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이 지역거점 대리점 육성이나 직판체계 구축을 통해 도매상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초 전라북도에 있는 한 대형 동물약품 도매업체가 부도나면서 그간의 도매상 중심 판매전략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도매상의 잇따른 부도가 '도덕적 해이'나 '무리한 가격 경쟁'에 있다고 진단한 뒤 신중한 판매망 선정, 판매망 다각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담보를 두지 않고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는 도매상이 부도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 지난해 말 대

형 도매상 2곳의 도산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깎이고 연구개발(R&D) 투자에도 큰 차질을 빚는 등 호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업체는 낮은 마진율을 감안할 때 도매상으로부터 한번 부도를 맞게 되면 1년 농사를 헛지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토로한다.

한 동물약품 제조업체는 “제품을 판매할 때 수금이 가장 먼저 걱정된다. 부도 피해가 크다보니 지금은 많이 파는 판매처보다는 믿을 수 있는 판매망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도매상의 대안으로는 지역거점 대리점 육성과 직판 체계 구축이 제시된다. 일부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에서 제품을 농가에 직접 배송하는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자사 제품만을 파는 대리점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내 동물약품 제조업체들

은 영세하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력과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도매상의 유희를 펼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8년 5월 21일

◎ “가축질병관련 주요 항생제, 내성률검사·연구 서둘러야”

일부 항생제 제제가 장내지표세균에 대해 내성률이 높다는 본보의 보도(4월 17일 11면)에 이어 돼지 호흡기 질병에 대한 감수성 시험 결과에서도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감수성 시험 결과가 낮은 것은 확률적으로 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들 제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검사와 조사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John D.Roberts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수의학 박사가 1998부터 아이오와 주립대,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 미네소타 대학교 등 3개 연구소에서 1998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야외 분리균주에 대한 시험관내 감수성 시험 결과 일부 항생제 제제의 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박사에 따르면 테트라사이클린(CTC)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OTC), 린코마이신, 타이로신 등은 돼지 연쇄상 구균과 홍막폐렴 등의 질병에 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린코마이신과 타이로신의 경우는 글래서씨병에도 감수성이 낮게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0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IPVS(국제양돈수의학회)와 같은해 AASV(미국양돈수의사회) 연례회의에서도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국내 동물약품 업체는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되는 균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결과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일부 연관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동물약품 업체 관계자는 “감수성이 낮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내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인 만큼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기자(kimym@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 2008년 5월 15일

◎ <기획>동물용항균제, 세계는 지금(上)

식품의 안전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21세기, 세계 축산시장은 동물용항균제의 사용량 감소가 전체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수의사 처방 등 각종 제도로 사료내 항생제 감축 등을 보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갈 방향을 짚어본다.

본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5회 동물용항균제연구회 심포지엄’을 참석하고 일본 바이엘 동물약품, 엘랑코 동물약품 등의 업체 관계자를 만나 취재했다.<편집자주>

일본, 2000년 들어 증가서 감소세로

일본 축산생물과학안전연구소의 헤이야마 박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항균성물질은 수의의료, 농산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 들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이야마 박사는 그의 연구조사에서 합성항균제나 사료첨가물로 사용되는 항생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에 절정을 이루다가 2000년에 들면서 급감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 때문이 아닌 시장 흐름에 따른 자체적인 감소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신페이 사사무라 일본 바이엘 PM은 “2002년 일본 정부가 항생제를 감축하기 위해 금지법안 등을 추진했지만 동물약품업체 등 관련업체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정부가 각 제제별 위험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일본 축산시장에서 동물용항생제의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법령 등의 강제조치보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사료공장 수의사 5명 상주

우리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사료용 항생제 금지를 주장하며 금과옥조처럼 제시했던 유럽의 경우는 실제로 각종 법규제를 통해 사료내 항생물질의 첨가를 금지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도 2001년에서 2004년의 치료용과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량 통계를 보면 치료용 항균제의 사용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비해서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비율은 매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성률의 추이도 마찬가지로 테트라사이클린류를 비롯한 주요 항균제에 대한 내성률도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균제의 사용이 정착화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돼 있으며 축산업을 비롯한 수의처방제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이 병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은 항생제를 첨가하는 사료의 경우 지정을 받은 사료공장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며 수의사의 진단에 기초한 처방전이 농가에 교부되고 사료제조공장은 이 처방전을 받아서 제조하고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즈오 후쿠모토 일본 엘랑코 품질관리 매니저는 “2200개 정도의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사료 공장을 찾았을 때 그 규모보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다”며 “사료공장내에 5명의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용약국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철저한 유럽의 제도는 매우 배울 만 하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 약하지만 위반은 엄격해

미국의 경우는 사료첨가로 사용되고 있는 항균성물질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다른 동물약품과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즉 사료첨가로 사용되는 모든 약품은 하나로 취급된다.

그러나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첨가농도나 사용일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통상 연속사용이 인정되고 성장촉진목적으로는 출하시까지 연속투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시 미국도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일찍이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사료첨가물에 대한 규제는 사료첨가물로 지정 신청서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료첨가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F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료첨가제로서의 동물용항생제는 신약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첨가물질은 별도로 관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목자와 용량·용법 투여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이 있고 수의사도 그 규정을 무시한 투약을 처방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은 생산현장에서 실시가능한 규제를 도입해 법령준수를 반드시 하도록 하며 위반은 엄격히 집어낸다”고 언급했다.

안희경 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08년 5월 14일

◎ AI여파 심각, 닭고기 소비 '뚝'

AI(조류인플루엔자)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쪼그라들어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연차적인 AI발생으로 40%까지 하락한 닭고기 소비가 어린이날 등을 앞두고 소폭 오름세를 보여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는 듯 보였으나 지난 6일 AI가 서울에서 까지 발생되면서 20%가 추가 급락, 예년보다 50~60%가량 소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희 이마트 계육담당 바이어는 “서울에서 AI가 발생했다는 보도 이후 소비자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오리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으며 생닭 수요도 크게 줄어 50%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바이어들은 이같은 현상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춘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점포 당 닭고기 주문물량도 지난 6일 이후 60~70%가량 줄어들어 발주량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체인점 등 닭고기 외식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8일 AI판정을 받은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 토속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던 춘천 닭갈비 전문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삼천동에서 몇 년째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식당주인은 “500석 규모의 매장이 점심시간이면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AI발생

보도가 나온 이후로 1~2테이블 정도로 손님이 줄었다”면서 “언론의 연이은 보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광진구청에서 발생한 AI가 모란시장에서 사온 핑 2마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가금류를 취급하는 재래시장 및 청계천을 비롯한 조류판매상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희경 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08년 5월 13일

◎ HACCP 기준원 돼지농장 HACCP 100호 돌파

현재 150여 농가 컨설팅 추산

양돈농장 HACCP지정농장이 100호를 넘어섰다.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6일 돼지농장 HACCP 적용농장 제100호와 제10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 100호 HACCP 지정 양돈농장은 국제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0번지 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는 모든 800두를 포함해 총 5700두 규모다. 101호 돼지농장 HACCP 적용농장은 모든 1500두를 포함해 총 사육두수 1만 8000천두 규모의 농업영농조합법인 (주)활천농장(종축업)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68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HACCP기준원 관계자는 “2006년 11월 가축사육단계 HACCP이 돼지농장부터 지정업무가 시작돼 2007년 2월 13일 우리밀 돼지농장이 최초

로 지정된 후 제100호가 탄생했다”면서 “현재까지 돼지농장 HACCP 지정신청은 115개 농장이며 14개 농장은 보완 및 실사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HACCP지정을 받은 101개 농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23개 농장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충북, 경기, 경북, 제주 순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다. 심사과정을 보면 49개 농장이 최초 실사로 지정됐고 50개 농장은 보완 후 지정, 2개 농장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최단 시일 내 보완해 최종 지정을 받게 됐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8년 5월 9일

◎ 가축질병 예방 ‘한몫’…위상 강화 ‘급선무’

공익수의사제 시행 1년…평가와 과제

실습생 취급 비일비재…정부 명칭변경 공모 후 의견 조율 중

지자체 수당 격차 커 불합리…업무 과부하·연속성 떨어져

지난해 5월 1일, 가축방역 업무라는 특명을 받고 공익수의사가 이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벌써 1년. 공익수의사들은 시·군·구 방역기관이나 검역원 등에 근무하며 질병을 막고 가축 질병을 조기 근절시키는 데 한몫을 담당해 왔다. 특히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에서 초소근무나 매몰작업 등 굵은 일을 마다 않고 잘 해내면서 주위로부터 호평을 들었다.

공익수의사 제도가 나름대로 제자리를 잡아가

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아직 고쳐야할 게 많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위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공익수의사는 6년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면허증을 가진 수의사들이 일정절차를 거쳐 뽑힌 어엿한 공무원 신분.

그러나 '공익'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다보니 '공익근무요원'으로 여긴다거나 실습생 취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명칭공모'를 통해 이름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는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의견조율' 중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처우개선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수의사 봉급은 중위 1~3호봉 수준.

국비에서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 여비 및 수당은 배치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본급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06만700원(각종세포함)이 일괄 지급된다. 문제는 배치기관에서 주기로 돼 있는 여비 및 수당.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최대 40만원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까지 합하면 최대 65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적은 수의사는 아무래도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할일이 많은 지자체에서 수당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6~7월 실태

를 점검해 처우 우수지자체에는 공익수의사를 우선 할당하는 장려책 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 부분. 일부 지자체들이 공익수의사 배치를 인원충원 쯤으로 생각하고 기존 인력을 다른 부서로 전환하다보니 업무의 과부하와 함께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지적.

이밖에도 부임 첫 1년간 공익수의사의 단독 출장을 자제토록 하라는 지침이나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업무 부여 등이 개선사항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공익수의사들은 군복무를 대체하며 현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 지원자의 경우, 특별채용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공익수의사 2기 132명이 임관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아무쪼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황재웅 공익수의사 1기 대표는 “국가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에 많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면서도 “공익수의사들이 좀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관계자들이 힘써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8년 5월 6일

◎ 검역원 닦 ·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동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방역·역학



조사 및 진단업무 등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가운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난 22일 전직원이 삼계탕을 점심으로 나눴다.

검역원은 매주 수요일을 '닭·오리고기 먹는 날'로 정해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8년 5월 2일

◎ **검역원 동약 허가시스템 편의성 높인다**

민원절차 간소화·심사기간 단축·기술검토 담당관제 도입 등 개선안 제시

고객 만족도·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신약의 경우 90일에서 60일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민원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2일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기술검토 담당관제 도입 등 동물약품 허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기술검토 민원업무는 민원담당 인력보강, 진행사항 통지, 인터넷 민원처리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만족도 및 청렴도 측정결과 처리기간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검토업무의 표준운영지침서(SOP)를 마련, 기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기술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업체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검토 담당관제 및 품목별 책임자를 운영해 책임감을 고취하고 비교적 단순한 검토품목(소독제,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은 동물약품관리과(검사과)에서 기술검토를 종료하는 등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을 30% 정도 단축해 시범운영(신약 : 90일→60일, 자료제출용 : 60일→40일)한 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의과학정보실을 개방하고 민원전용 고속스캐너를 설치해 제공키로 했다.

검역원은 이번 품목허가시스템 개선으로 처리기간 적정성 및 이의제기 용이성 등에 대한 민원불편이 상당히 해소되고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원은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서 민원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내 해소함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며 업무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8년 4월 28일